



최근 콜로라도 산불 사태에 따른 이민 신분 여하를 막론하여 받으실 수 있는 안전과 지원에 관한 국토 안보부 성명

공표일: 2022 년 1 월 6 일

워싱턴 – 국토 안보부는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 기관 협력자들과 공조하여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 (ICE) 과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 (CBP) 이 일반 대중께 이해시켜 드리는 바는, 긴급 상황 대응과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은 [보호구역](#) 으로 간주되어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과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의 법집행이 시행되지 않을 것임이라는 점입니다. 긴급 대피로, 긴급 대피소, 음식, 식수, 긴급 물품 지원 지급소, 자연 재해 관련 지원 요청 등록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와의 재회 장소 등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까지를 보호 구역으로 이 법령을 확대 적용하여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과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의 법집행은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이나 지역 당국, 주 당국의 요청이 있는 한도 내에서,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과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은 수색 구조, 항공로 충돌 예방, 그리고 여타 공공 안전 수칙 임무의 수행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과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은 개인의 이민 신분을 불문하고 이민법 집행 임무를 떠나 응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토 안보부의 그 어떠한 관계자도 이민법 집행 시행의 일환으로 응급 재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들은 지원을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국토 안보부는 권장하는 바입니다.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의 재해 보조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문은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get-assistance/forms> 에 방문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토 안보부는 일부 재해 생존자들이 본인의 이민 신분 문제를

우려하여 연방 응급 재난 관리청의 재해 보조 신청을 두려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은 신청자나 신청자 가족의 이민 신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들의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의 법집행 목적을 위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요청에 한하여 극소수의 경우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과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은 이러한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사망, 폭력, 혹은 타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있는 위험을 근거로 한 국가 안보와 공공에의 실질적 위협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입니다. [안내문: 국적 상태와 재해 보조 지원 혜택 자격 요건 관련 질문과 답변 | FEMA.gov](#)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미 연방 이민국에의 이민 비자 신청, 청원서 제출,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미 연방 이민국에 연락을 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humanitarian/special-situations>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로 인하여 긴급 대피소, 원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이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출신국, 정치 성향에 근거하는 차별 없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